

대만의 선진국 담론과 대만의 자아정체성[†]

-장제스 시기를 중심으로(1950~1975)-

김은미*

I. 머리말

II. 전후 대만의 선진국 담론의 형성과 전개

III. '후진국'이라는 대만의 자아정체성(1950년대~1960년대 중반)

IV.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대만의 자아정체성(1960년대 중반~1975년)

V.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자신을 인식하는 중요한 인식체계를 형성했다. 선진국은 대만에서 자신의 발전 상황을 판단하고 정체성을 확정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현재 대만은 자신이 선진국이라 인식하지 않는다. 대만은 자신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형성으로 미국식 경제체제가 대만에 도입되어 국가의 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대만에서 선진국은 대만이 추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간다.

대만에서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어 정착하는 시기는 1950년대다. 1960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5709).

* 金恩美. 국립대만사범대학(國立臺灣師範大學) 동아시아학과 교수.
e-mail: enmei@ntnu.edu.tw.

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고도 경제발전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제스(蔣介石) 집권 시기인 1950년부터 1975년까지가 선진국 담론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제스 시대의 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선진국 담론이 대만에서 정착되어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 담론 속에서 형성된 대만의 자아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진국 담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는 신문 매체를 이용해 살펴봤다. 대중 매체인 신문이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대만, 장제스, 선진국 담론, 자아정체성,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신문매체

■ Abstract

The Discourse on Developed Country Status and self-identity in Taiwan: A Focus on the Chiang Kai-Shek Period (1950-1975)

Chin Enmei

Like South Korea, Taiwan has defined developed countries as a significant recognition system for national-promotion. Developed country status has served as an essential measure of national self-sufficiency and served as a means of confirming Taiwan's identity as a 'nationstate'. Currently, Taiwan does not claim developed country status but labels itself as sitting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statuses. In the U.S.-Soviet bipolar Cold War period, Taiwan implemented an American-style economic system that aimed to join the 'free world'. The discourse on developed countries emerged during the state's promotion of modernization in the 1950s, which set the attainment of developed country status as an ideal goal for Taiwan that the country should learn and pursue. From the 1960s to the mid-1970s, the country also benefited from high economic growth. Therefore, Chiang Kai-shek's (蔣介石) rule from 1950 to 1975 is crucial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discourse during Taiwan's high-growth economy under Chiang

Kai-shek. It also explores the formation of Taiwan's self-identity as presented through its discourse on achieving developed country status with an analysis of newspaper media, which has played essential roles in disseminating such discourse in Taiwan.

Key-words : Taiwan, Chiang Kai-Shek, Discourse on developed country status, Identity, Developing country, Economic growth, Newspaper media

I. 머리말

현재 대만에서는 선진국은 긍정적인 표상으로 대만이 배우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 사용되는 ‘선진국가’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사회복지·의료·보건제도·빈부격차의 감소·저 환경 오염·생활품질 등 다방면의 발전을 이룬 국가를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부른다. 즉 현재 대만에서 선진국은 풍요롭고, 문명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상징인 것이다.¹⁾

이러한 선진국의 표상이 대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195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형성으로 미국식 경제체제가 대만에 도입되어 국가의 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담론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대만에서 선진국은 대만이 추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대만이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대만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는 모범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담론이 형성되었다.

김종태는 한국의 선진국 담론 속의 한국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²⁾ “정체성은 사회적 행위자가 자신에 대해 지니는 개별성 또는 독특성의 이미지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나 집단 정체성의 형성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설정하는 인식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중요한 타자’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중략) 선진국 담론에서 한국의 정체성은 ‘중요한 타자’ 둘에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타자인 선진국과 부정적인 타자인 후진국이다.”(김종태. 2018, 36)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자신을 인식하는 중요한

1) 현재 대만에서 사용되는 선진국 개념과 담론 유형은 왕언메이(2018)를 참조하기 바람.
2) 선진국 담론에 관한 연구는 김종태(2018)의 연구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선진국 담론 분석에 관해서는 김종태의 저서를 주로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인식체계를 형성했다. 대만은 선진국을 미래의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자신이 선진국과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후진국이라는 부정적인 타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줄다리기를 하며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다. 즉, 대만의 발전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중요한 장치로 ‘선진국’이 기능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자신이 선진국이라 인식하지 않는다. 대만은 자신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왕언메이. 2018, 220-221). 대만에서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어 정착하는 시기는 1950년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고도 경제발전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제스(蔣介石) 집권 시기인 1950년부터 1975년까지가 선진국 담론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제스 시대의 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선진국 담론이 대만에서 정착되어 발전되어가는 과정 살펴보고 선진국 담론 속에서 형성된 대만의 자아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진국 담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서는 신문매체를 주로 활용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대중 매체인 신문이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3가지의 주요 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관영 신문으로는 『中央日報』, 민영 신문으로는 『聯合報』와 『中國時報』를 선택했다. 당시 대만에는 많은 정부 발행 신문이 있었지만, 『中央日報』의 발행 부수가 가장 많았다. 민영 신문으로는 『聯合報』와 『中國時報』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中央日報』는 정부 차원에서, 『聯合報』와 『中國時報』는 민간 차원에서 선진국이 어떻게 사용되어 담론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기로 당시 대만의 신문은 정부의 포섭하에 있었기 때문에 『聯合報』와 『中國時報』도 정부 정책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³⁾ 따라서 당시의 민간 차원에서 선진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中央日報』 보다는 『聯合報』와 『中國時報』가 민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中國時報』는 1950년 『徵信新聞』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1961년 『徵信新聞報』로 개명되었고, 1968년 『中國時報』로 다시 바뀌었다. 『聯合報』는 1951년 9월 16일에 창간되었다. 『中央日報』는 남경중앙일보사(南京中央日報社)에 의해 1949년 3월 22일부터 대만에서 발간된 신문이다.⁴⁾

당시 대만에서는 선진국은 ‘선진국가(先進國家)’와 ‘개발국가(開發國家)’ 혹은 ‘이개발국가(已開發國家)’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개발국가’ 혹은 ‘이개발국가’는 주로 경제적인 용어로 쓰이며 상당한 경제 발전 규모를 갖춘 국가를 말하는 반면 ‘선진국가’는 ‘진보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복지 등 다방면에서 발전을 이룩한 국가를 말한다(왕언메이, 2018, 202-203). 1950년대 대만에서 ‘선진국’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선진국가’를 ‘○○선진국가’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민주선진국가’, ‘과학선진국가’, ‘경제선진국가’, ‘공업선진국가’ 등등이다. ‘개발국가’는 주로 경제적인 내용일 때 사용하고, 사회, 정치 등을 주제로 하는 기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본고는 ‘선진국가’를 중시하는 이유는 현재 대만에서 ‘선진국가’가 ‘개발국가’ 혹은 ‘이개발국가’ 보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선진국가’ 담론의 형성과 현재까지의 발전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발전’이 지구적 패권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대만은 1950년대부터 발전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그와 더불어 ‘경제적 발전’이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 1960년대 고도 경제발전 시기를 맞이하면서 경제발전이 초점이

3) 대만의 신문 정책에 관해서는 金恩美(2019)를 참조 바람.

4) 『聯合報』에서 ‘선진국’을 키워드로 검색된 사실 수는 279건이다. 『中央日報』와 『中國時報』는 기사 제목 밖에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아, 검색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聯合報』는 기사 전문(全文)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 양이 너무 많아 사실에 중점을 맞추었다.

맞춰진 ‘개발국가’ 혹은 ‘이개발국가’가 ‘선진국가’ 보다 적지만 꽤 많이 사용되었다.⁵⁾ 그러나 1970년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표가 경제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대만의 발전 목표는 경제와 더불어 문화, 정치, 복지 등 다방면으로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선진국가’로 상징되면서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선진국가’에 한정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대만에서 선진국 담론에 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⁶⁾ 발전 담론은 대만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담론 중 하나다.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전초기지가 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미국식 발전 모델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발전 담론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무척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발전 담론의 중요한 부분인 선진국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대만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상이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만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5) 1950년부터 1975년까지의 『中國時報』기사 제목을 예로 들자면 ‘선진국가’와 ‘개발국가’의 사용 빈도는 ‘선진국가’가 11건, ‘개발국가’가 8건으로 ‘선진국가’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개발국가’는 ‘이개발국가(已開發國家)’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1960년대에는 ‘개발국가’가 ‘이개발국가’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1970년 들어서는 ‘이개발국가’가 ‘개발국가’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선진국가’가 ‘이개발국가’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6) 대만의 선진국 관련 선행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에 관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연구, 경제연구, 나노테크연구, 혹은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연구, 대만과 선진국의 비교연구 등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陳雅文(2015), 林建山(2016), 蔡春進의(2011), 楊惟任(2016), 許志義의(2016), 柯勝樺(2008), 顏志清(2015), 賴奕君(2010), 趙靜宜(2006).

II. 전후 대만의 선진국 담론의 형성과 전개

1. 선진국 개념의 등장

1949년 1월 트루먼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대외정책의 하나로 ‘저발전/저개발(underdeveloped)’ 국가들의 ‘발전/개발(developed)’을 거론했다. ‘저발전/저개발’은 당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였다. 트루먼은 연설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빈곤 국가를 제국주의의 수탈의 결과로 보고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려는 인식을 발전단계로 보았다. 또한 이미 발전한 국가를 제로섬 관계에 입각하여 적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발을 통한 발전’이라는 발상은 1949년 당시 무척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에서 탈출하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한 뉴딜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은 이와 같은 방법을 수출하게 되었다(후지이 다케시. 2015, 57-58).

1950년 『中央日報』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대만에서도 발전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억압민족’이고, 선진국가는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국주의국가다. 왜 ‘피억압민족’, ‘제국주의국가’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후진’과 ‘선진’이란 글자로 바꾸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당면한 국제정세의 발전이 이미 억압과 착취의 시대에서 공업 선진국가와 후진국가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이익과 협조를 추구하는 시대로 변환했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때마다 식민국가 및 반식민국가의 힘과 그들이 제국주의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시험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억압민족은 자존심을 경각하게 되었고, 민족 관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국가의 경각심을 유발해 그들이 19세기의 억압

착취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中央日報. 1950.2.14)

이 기사는 ‘선진국가’와 ‘제국주의국가’를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과거의 ‘제국주의국가’가 현재의 공업 선진국으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후진국가’, ‘피억압민족’, 그리고 ‘식민국가(반식민국가)’ 이 세 단어는 같은 존재로 분류했다. 과거의 ‘피억압민족’인 ‘식민국가(반식민국가)’는 공업 후진국으로 재규정했다. 또한 ‘후진국가’도 자존심을 경각했고, ‘후진국가’가 ‘선진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가’는 과거의 억압과 착취를 포기하고 ‘후진국가’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이 현재 국제정세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위에 서술한 트루먼 대통령 취임 연설 내용과 부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사가 시사하는 가장 큰 의미는 전후 대만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제국주의국가’를 ‘선진국가’로 바꿔 부르는 것에 동의하고 ‘피억압민족’인 ‘식민국가(반식민국가)’를 ‘선진’의 반대인 ‘후진국가’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대만에서도 세계를 보는 인식체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기사는 대만에서 선진국이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사가 실린 1950년은 이러한 발전주의 혹은 선진국 개념이 아직 보편화 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후 발전주의가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적 패권 담론이었던 문명 담론이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정당성의 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 ② 지구적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 간 것,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며 국제무대의 공식 일원이 된 것, ④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의 형성이다(김종태. 2018, 46).

냉전체제는 발전주의 혹은 선진국 담론 형성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1950년은 대만이 아직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이고, 미국식 경제체제와 ‘개발을 통한 발전’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기사와 같은 선진국 인식을 대만 정부와 사회 엘리트들이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950년 선진국 담론이 대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2.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편입과 경제체제의 전환

대만에서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바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편입과 미국식 경제체제의 도입이다. 이 두 가지 요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한국전쟁과 미국 원조다.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대만은 전후 중화민국에 반환될 것이 약속되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대국이 이끄는 전후 세계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다.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미국, 영국, 소련이 ‘세계의 경찰관’의 역할을 담당해 대국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46년 7월 중국대륙에서 국공내전이 재발했을 때 미국은 중국국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이 제조한 최신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중국국민당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전쟁 초반에는 중국국민당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1947년부터 중국공산당이 동북3성을 시작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자, 1948년에는 중국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졌다. 1949년 4월에 난징(南京), 5월에 푸젠성(福建省), 8월에 상하이(上海)가 중국공산당에 함락되었다. 중국국민당 중앙기관은 수도 난징이 함락된 후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청두(成都)를 전전하다가 12월 8일 총통부와 행정 관료가 대만에 도착했다. 12월 9일 행정원은 대만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10일에는 장제스가 대만에 도착했다. 11일에는 중국국민당 중앙당

부가 대만으로 이전했다(若林正文. 2008, 58·61).

중국국민당의 패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이는 ‘중국의 상실’과 진배없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후 ‘중국의 상실’에 직면한 미국은 1949년 8월 『중국백서』를 발표해 장제스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질책하고, 1950년 1월 5일에는 중국의 현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것과 중국국민당 군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1월 12일에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방위라인에서 대만과 한반도는 제외되었다(若林正文. 1997, 67; 若林正文. 2008, 61).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대륙에서 설립하고, 대만으로 패퇴한 중국국민당 정권의 섬멸을 위해 ‘대만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화민국은 국가 존속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중국국민당이 끝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안겨준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 되어,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대만해협중립화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한편 장제스의 ‘반공대륙’ 행동도 저지했다. 그리고 미국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출동시켜 대만의 안전을 확보했다(若林正文. 2008, 62).

이와 같이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만은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편입되어 ‘자유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반공국가’가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쟁 개입으로 대만은 서태평양 방위 라인에 포함되었고, 미국은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대외원조를 재개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와 경제 원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51년에 재개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1965년까지 지속되었다.⁷⁾

<표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군사원조

7) 대만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재개된 것은 1950년이지만, 대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조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51년 부터였다(薛化元. 2008, 249-250; 文馨瑩. 1990, 91-92).

금액이 경제원조금액을 초과했다. 그 주요 원인은 대외원조를 통한 대만의 군사방위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다(文馨瑩, 1990, 92). 그러나 군사원조 금액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0년에서 1955년까지의 경제원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상당히 높았다. 이것은 냉전체제 속에서 최전방 국가인 대만이 중국공산당을 저지하는 군사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군사적으로도 방위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았던 것이다.

<표1> 대만에 대한 미국 대외원조 금액(1950~1967)

(단위: 백만 달러)

미국국회 연도	1950~1955		1956~1960		1961~1967		1950~1967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경제원조	627.8	47.1%	500.5	32.0%	457.5	42.6%	1585.8	39.9%
군사원조	704.1	52.9%	1064.3	68.0%	615.8	57.4%	2384.2	60.1%
합계	1331.9	100%	1564.8	100.0%	1073.3	100.0%	3970	100.0%

출처: 文馨瑩, 1990, 91.

냉전 하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대외원조는 미국의 냉전 전략의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직접적인 군사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원조 역시 ‘자유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국무성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전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 전제로 삼았던 것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위협요소로 분류한 점이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민족주의의 성행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가 직접 간섭하고 통제하는 일국 단위의 경제체제를 열린 ‘자유경제’로 유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후지이 다케시. 2015, 57-58).

주목할 만한 것은 1952년경부터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대만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自由中國』이라는 잡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인하이광(殷海光)도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분리해 논의를 전개했다. 대만에서는 1950년경 지식인들이 냉전적 이분법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52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자본주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自由中國』에서는 냉전적 이분법을 적극 수용해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문장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후지이 다케시. 2015, 67-69).

또한 1952년 말부터 1954년 봄까지 대만에 적합한 경제체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논쟁의 중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계획경제’ 아니면 ‘자유경제’? 어떤 것이 대만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② 공영사업 아니면 민영사업? 어떤 것이 대만의 발전에 적합한가? 이 논쟁을 둘러싸고 3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의견은 공영기업은 경제발전의 중추이며 정부는 응당 자본주의 기업을 규제하고 그들의 발전을 제한해 공영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정부에 전면적인 시장경제 실시를 호소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계획경제 유지를 지지하지만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운용해 개인이 시장경제의 경쟁과 창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의견 중 두 번째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논쟁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의 대립으로 진행되었다(郭岱君. 2015, 16·109).

당시 중화민국 정부 관료와 경제 관료는 주로 세 번째 의견의 지지자였다. 논쟁의 발단이 된 것도 재정부 장관이었던 연자간(嚴家淦)과 재정청장이었던 런셴첸(任顯群)이 토지개혁을 위해 4대 공영기업(대만시멘트(台灣水泥), 대만지업(台灣紙業), 대만공광(台灣工礦), 대만농림(台灣農林))의

주식과 토지채권으로 지주와 토지를 교환할 것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원장인 천청(陳誠)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4대 공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이것은 삼민주의 중에서 민생주의(民生主義)의 ‘민간 자본을 절제해 국가 자본을 발달시킨다(節制私人資本 發達國家資本)’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郭岱君. 2015, 109). 더욱이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대륙 시기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해 왔다. 대만을 접수 한 후에도 계획경제를 실행하고 국영기업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삼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산업화를 가속시킨다고 믿고 있었다(후지이 다케시. 2015, 60).

이러한 중화민국의 경제노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냉전 속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대외원조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천청을 지지했으며, 인종룡(尹仲容)은 강연 등을 통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⁸⁾ 민영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은 중국국민당 내부의 삼민주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장제스의 민영화 지지, 후스(胡適)의 계획경제 비판과 ‘자유경제’ 지지로 인해 세 번째 의견이 승리를 거두었다. 장제스와 천청은 현실적으로 미국 대외원조 운용 방침에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영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郭岱君. 2015, 110-119).

대만은 미국의 대외원조를 위해 ‘자유경제’ 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민영화’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정부 지도자와 사회 엘리트들이 ‘민영화’와 기업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제인식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8) 인종룡(尹仲容)은 전후 초기 대만의 대표적인 경제관료였다. 1949년 대만구생산사업관리위원회(台灣區生產事業管理委員會)의 부주임 위원을 역임하고, 1953년에는 경제안정위원회(經濟安定委員會), 공업위원회(工業委員會)의 간사를 담당했다. 1954년에는 경제부장(經濟部長) 겸 중앙신탁국(中央信託局) 국장을 담당했다. 그 후 1958년에 미국원조운용회(美援會)의 부주임 위원을 담당했다.

대만 정부 지도자와 사회엘리트들이 미국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미국은 대외원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만에 ‘Economic Stabilization Board(ESB)’의 설립을 요구했다. 대만은 이 요구를 수용하여 1951년 2월 행정원 내에 재정경제소조위원회(財政經濟小組委員會, 이하 재경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3년 7월 재경위원회를 ‘경제안정위원회(經濟安定委員會)’로 개조하고 영어 명칭은 그대로 ESB로 했다. 1951년 3월 재경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측과 중화민국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이 회의의 토론은 예산, 물가와 외환에 집중되었다. 재경위원회는 미국의 경제원조 집행상황과 군사원조·경제원조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瞿宛文, 2017, 211-213).

‘경제안정위원회’의 핵심기관인 공업위원회는 1957년부터 『경제총간』을 발행했다. 발행물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후진국 개발과 경제계획에 관한 번역, 후진국 개발에 관한 유엔 보고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의 출판물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유경제’는 미국의 현행 자유민주적 경제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책도 출판되었다(후지이 다케시, 2015, 70·73).

이처럼 대만에서 냉전적 이분법의 자본주의 논리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1952년 경제체제 논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편입과 미국 대외원조를 통해 미국식 경제 인식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업위원회에서 출간한 출판물을 통해 대만은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분류하고 후진국은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에는 대만 경제의 노선이 또 다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변화의 배경 역시 미국의 대외원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7년부터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은 ‘원조’ 추세에서 ‘발전’ 추세로 전환되었다.

즉, 원조 대상국이 자신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하고 민영기업의 성장, 국내시장의 개방, 미국 민간기업의 투자 허용을 달성해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이었다. 1959년부터 미국은 대만이 경제 개혁을 추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원조는 점차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종료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60년 1월 인종룡은 미원운용위원회(美援運用委員會) 동료들과 ‘19개항목재경개혁대책(19點財經改革措施)’을 작성했다.⁹⁾ ‘19개항목재경개혁대책’은 경제발전, 예산, 금융, 외환 4대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개혁의 주요 골자는 불필요한 일체의 경제 통제를 해제하고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해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郭岱君. 2015, 176, 180, 185-186).

‘19개항목재경개혁대책’이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 통제를 해제하고 시장경제로 이전한다는 원칙은 지켜졌다. 이로써 대만은 자유무역을 통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후지이 다케시. 2015, 73). 이것은 대만이 미국식 ‘자유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3. 선진국 담론의 정착

앞에서 발전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전후 많은 식민지들의 정치적 독립을 지적했다. 식민지들이 근대적 국가 체제를 수립하자 그들을 더는 야만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야만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았다. 지구적 역학 관계에서 식민지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해졌다(김종태. 2018, 47).

9) 1958년 9월 경제안정위원회가 폐지되어 미원운용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천청(陳誠) 행정원장이 주임, 인종룡(尹仲容)이 부주임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종룡이 미원운용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만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는 아니지만,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함에 따라 식민지 독립 국가와 비슷한 여건이 만들어졌다.

와카바야시 마사히로(若林正丈)는 전후 대만의 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① 중국대륙에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항한 ‘정통 중국 국가’로 스스로를 정의함으로써 국가가 확립되었다. ② 이 국가는 ‘무장한 정치 이민’ 집단으로서 중국 내전의 패배와 더불어 대만에 이주한外省人(外省人)이 구조적 우위를 차지한 ‘정착민 국가(settler state)’다. ③ 이 ‘정착민 국가’는 동서 냉전에서 다투고 있는 미국의 비호를 받아 아시아에 파급된 동서 냉전체제의 전초기지로서 미 제국 시스템 주변에 통합됨으로서 형성되었다(若林正丈, 2008, 5-6-80).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만이 ‘외성인이 구조적 우위를 차지한 ‘정착민 국가’라는 점이다. 대만에서 본성인(本省人)이 전체 인구에서 85.3%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며, 외성인은 13%, ‘원주민’은 1.7%를 차지한다.¹⁰⁾ 따라서 대만에서는 외부에서 이주한 소수의 외성인이 본토의 본성인과 원주민을 지배하는 국가 구조가 형성되었다. 대만의 ‘정착민 국가’는 ‘외래정권’이라는 전제하에 형성된 개념이다. 중국국민당 정권이 대만에서 형성한 국가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는 아니지만, 식민지 종결 후 외부에서 진입한 세력이 새롭게 수립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독립 국가와 비슷한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종태는 담론을 “인식 대상을 해석, 구성하는 체계로서의 해석적 틀 또는 그런 해석적 틀이 상징체계를 따라 표명된 것”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선진국 담론 형성의 중요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패권주의를 제시했다.

10) 대만 민주화 후, 대만 국민은 4개의 종족(에스닉) 그룹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 되었다. ① 대만 ‘원주민’, ② 17~19세기 중국 푸젠성(福建省) 남쪽에서 다량으로 대만으로 이주한 ‘민난인(閩南人)’, ③ 17~19세기 중국 본토에서 이주한 객가인(客家人), ④ 1949년 중국국민당이 국공내전에 패배한 후 장제스와 같이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外省人)이다. 민난인과 객가인은 본성인(本省人)으로 불리며, 외성인과는 대립적인 개념을 형성한다(王甫昌, 2003, 57; 黃宣範, 1995, 20).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삼은 패권은 강압에 의존하는 직접적 지배와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패권 상황은 지배·피지배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다.”(김종태. 2018, 41·43)

‘제국주의 국가’를 ‘선진국가’로 대치하고 ‘피억압 민족’을 ‘후진국가’로 대치했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양자는 억압과 피억압의 강압적인 지배라는 대립 관계였으나, ‘선진국가’와 ‘후진국가’로 변환하면서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로 승화한 것이다. 지구적인 담론 전환에 따라 세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명에서 발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전의 야만 사회는 발전 담론의 틀에서 다시 저발전으로 규정되면서 열등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새롭게 부상한 발전주의는 단선적 진화론적 가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마치 생물이 진화 또는 성장하듯이 국가 발전의 경로도 하나뿐이며, 미국이 가장 발전 또는 성장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전통 또는 후진 사회는 이른바 따라잡기로 근대 또는 발전의 상태에 도달해야 했다(김종태. 2018, 50).

대만의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어 정착해 가는 시기는 1950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지구적 패권 담론으로 추진된 발전 담론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발전 담론의 틀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발전국(developed country)’으로 규정되는 반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저발전국(underdeveloped country)’ 또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구분된다(박정현·김종태. 2015, 137). 대만의 신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신문에서 공산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의미로 ‘선진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聯合報』는 1953년 전후 8년째를 맞이해 ‘트루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트루먼주의의 기본 개념은 바로 자신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 더 나아가 서로의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3. (중략) 자유세계의 입체적인 방비를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자유지역 침투를 철저히 봉쇄한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자유세계의 실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선진국가와 후진국가가 서로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조율해 낸다는 의미도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 경제는 새로운 생명을 획득할 수 있고, 후진국의 경제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으로 자유경제는 결국 자아 붕괴할 것이라는 공산당의 황당한 논리를 분쇄할 수 있다.”(聯合報. 1953. 1.15)

즉, ‘선진국가’와 ‘후진국가’가 존재하는 세계를 ‘자유지역’으로 확정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해야만 공산주의와 대항하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산국가는 선진국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대만의 신문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인 선진국과 공산주의와의 대립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聯合報. 1957.11.25).

대만의 국어사전에서 ‘선진국가’의 ‘선진’의 뜻은 ‘앞에 위치해 있으며 모범·본보기가 됨(位居前列, 可為表率)’이며, 그 반대어는 ‘보수, 낙오, 낙후, 후진(保守, 落伍, 落後, 後進)’으로 제시되어 있다.¹¹⁾ ‘선진국가’는 ‘후진국가’의 모범·본보기가 되었고, ‘후진국가’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다.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협력 관계가 추구되고 ‘선진국가’가 ‘후진국가’의 ‘앞에 위치해 있으며 모범·본보기’가 되는 국가라는 담론 속에서 ‘후진국가’에 대한 ‘선진국가’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선진국 담론에서 선진국은

11)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 검색일 2020.6.3.).

후진국이 가야할 경로를 이미 경험한 선진자(先進者)의 위치에서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표상되었다(김종태, 2018, 50). 그리고 대만의 신문에서 선진국이 선진자로서 후진국을 이끌어가고 세계경제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聯合報』는 1951년 기사에서 세계경제 번영을 위해 ‘생산선진국’은 각국의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聯合報, 1951.9.20). 그 각국 속에는 후진국도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53년 『聯合報』 기사는 “과거 반세기 우리의 분투는 우리 국가를 현대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력 외에 자유 민주적인 평화를 사랑하는 선진국가가 우리에게 최대의 군사·경제 원조를 해 줄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미국은 자유세계를 통솔하는 국가로서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 또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 자유중국에게도 예외는 아니다!”(聯合報, 1953.11.11)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서 자유중국은 대만을 말한다. 『聯合報』는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만이 현대화 하는데 있어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원조는 대만이 현대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1959년 『中央日報』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했던 호프만이 ‘선진국가’가 10년 이내에 5백억 달러를 출자해 ‘낙후국가(落後國家)’를 원조할 것을 건의했고 미국이 원조 금액의 반을 부담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中央日報, 1959.3.1). 『中央日報』는 호프만의 생각을 보도함으로써 ‘선진국가’ 혹은 ‘고도발전국가’는 ‘낙후국가’를 원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1950~1960년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후진국을 자기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각 진영에서 원조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박정현·윤은자, 2017, 23). 따라서 후진국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III. ‘후진국’이라는 대만의 자아정체성(1950년대~1960년대 중반)

전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을 접수한 후, 일본 독점 자본 지배 체제와 전시 통제 경제의 ‘유산’을 정치 상황이 혼란한 가운데 신정부가 접수하게 되었다. 1945년~1952년은 일본경제로부터의 자립과 경제체제의 재편을 도모하는 시기로 무척 혼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경제가 부흥하는 시기는 1953년부터다. 그 근거는 첫째, 악성 인플레이션의 특징이었던 경제혼란이 수습되었다. 둘째, 농업개혁이 완료되었고 4대 관영기업의 민간 불하 정책이 완료되었다. 셋째, 미국 대외원조의 재개와 효과적인 원조 활용으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어 1953년 제1차 경제계획이 추진되었다. 넷째, 농업 생산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고 시기(1937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園田哲男, 2003, 8·14). 1950년대 대만경제를 지원한 핵심은 국내 농업이었다.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개혁으로 인한 농촌토지소유권에 구조변화, 지주의 소멸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농촌경제에 개입해 생산을 촉진시키고 잉여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홍창기·정대준, 1999, 213).

선진국의 공업자본 축적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영국식은 자국 외의 식민지나 세력 범위 지역을 이용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이고, 미국식은 자국 내의 자원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저가이지만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해 국내 소비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聯合報』는 대만에 있어 필요한 것은 미국식 자본 축적 방식이라 지적하면서 대만 경

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聯合報. 1952.8.15).

미국 원조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15년간 연간 평균 1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1952년 9월 26일 재경위원회(‘경제안정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제1차 4개년 경제건설계획’이 실시되었다. 미국이 설정한 기본적인 방향은 ‘자유경제’였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편법으로 미국은 대만에게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승인했다(후지이다케시. 2015, 66). 1954년 8월 미국의 경제고문단(Economic Advisory Group, EAG)이 대만을 방문해 경제발전, 재정, 세무, 외환 개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제1차 4개년 경제건설계획’은 미국 대외원조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외환 획득과 국제수지균형 달성에 맞춰졌다(薛化元. 2008, 281). ‘제2차 4개년 경제건설계획’(1956-1960) 기간은 광공업생산기반의 확충, 수출산업육성, 고용증대에 초점을 둔 경제 정책을 실행했다(홍창기·정대준. 1999, 213).

대만에서는 선진국을 배우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1950년대부터 등장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구미 각 선진국가의 과학 문명은 반드시 뒤쫓아 따라잡아야 한다.”(聯合報. 1951.9.17) “대만 공업의 잠재력은 타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대만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이 노력하고 분발하기만 하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聯合報. 1957.4.17) 이러한 공업·경제 분야 외에도 유치원의 증설, 소년 범죄의 저하, 천연 에너지 개발, 항공업의 국가 지원, 문예 정책, 과학·농업·어업 발전 등의 각종 분야에서 대만은 선진국을 배우고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되었다(徵信新聞. 1958.10.6; 1958.10.20; 1959.4.22; 1959. 7.25; 聯合報. 1952.11.2; 1953.5.24.; 1956.2.28).

1960년대에 들어서도 선진국은 여전히 대만 국가 발전의 기준이었다. 『聯合報』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W. W. Rostow)에 의하면 세계 각 ‘공업선진국’의 발전 역사를 보면 거액의 외자(外資) 수입은 공업 발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대만의 경제도 발전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聯合報. 1962.3.15). 즉, 대만은 선진국이 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이 경제발전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업을 중시하고 상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聯合報. 1965.1.13). 『徵信新聞報』는 일반 시민들이 서양을 숭배하는 심리가 강하지만 대만 상품의 품질은 국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공업선진국가’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국산품애용운동’을 추진해 국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徵信新聞報. 1964.1.20).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3년~1963년은 경제부흥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한 내수주도이지만, 수출성장률도 24.7%를 기록했다. 대만의 수입대체 공업은 외성인(外省人)이 경영하는 민간섬유산업 위주로 발전하게 된다. 생산율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 협소로 인해 1950년대 말부터 새로운 판매 출로를 모색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기존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에서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당시 미국의 국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대만 정부에게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石田浩. 2007, 136).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앞서 거론한 ‘19 항목 재경 개혁 대책’에서 비롯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9 항목 재경 개혁 대책’에 의거해 1960년 9월 10일 ‘수출장려조례(獎勵出口條例)’가 실행되었고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郭岱君. 2015, 196-199). 이 조례의 따라 민영기업의 수출이 간편화되었다. 이 시기 대만의 수출을 주도한 것은 공영기업이 아니라 민간 중소기업이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은 민영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대만의 공업화는 공영기업에서 민영기업이 주도로 바뀌었다(石田浩. 2007, 137).

<표2> 시기별 주요 경제성장 지표 추이(1953~1985)

	1953~1963	1964~1973	1974~1985
	부흥기	안정성장기	불안정성장기
	제1차 수입대체기		제2차 수입대체기
	내수주도	수출주도	
국민총생산(GNP)성장률	7.7%	11.1%	7.7%
농업생산성장률	4.8%	5.5%	3%
공업생산성장률	11.6%	19.4%	8.9%
수출성장률	24.6%	29.7%	18.7%
소비자물가상승률	8.3%	3.6%	9.8%
무역의존도 비율	28.7%	57.3%	98%
국민저축률	10%	25%	32%
자본형성(투자)율	17.1%	24.5%	28.6%
무역수지흑자액	0.7억달러	0.6억달러	31억달러

출처: 園田哲男. 2003, 15.

주: ① 비율은 기간 중 연평균 또는 연률을 나타낸다.

② 무역의존도는 국내총생산(GNP)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무역수지흑자액은 기간 중 연평균 또는 연액.

1960년대 들어 경제가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자신을 ‘후진국’으로 인식했다. 미국 경제고문단이 1954년 대만을 방문했다. 『聯合報』는 ‘경제선진국가’의 재정 및 경제 기술은 ‘낙후국가’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하며 미국 경제고문단이 ‘낙후국가’인 대만 경제 개선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聯合報. 1954.10.8.).

1950년대 중반 대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聯合報』는 그 노력을 칭찬하며 여기서 기뻐해서는 안 되고 대만은 여전히 빈곤하고 낙후한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유중국이 요 몇 년간 건설에 매진한 결과, 공·농·광업 등의 증산 수치를 보자면 우리의 성과는 칭찬할 만하다. 그

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공업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머나먼 여정이 남아 있다. 구미 선진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빈곤하고 낙후해 있다.”(聯合報, 1956.3.27)

1960년대 경제 안정성장기에 진입한 대만은 경제가 급성장했다. 『聯合報』는 사설에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률은 ‘낙후국가’의 경제발전 초기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대만은 수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중화민국의 최근 몇 년의 공·농업 생산 및 수출은 이미 큰 진전을 보였다. 전체 경제성장률도 미국을 훨씬 뛰어넘었다.……대만 경제의 이런 급속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전후 이래 각국 경제발전 사실에 비추보면 어떤 낙후국가든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항상 일반 공업 선진국가를 초월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이르면 이런 속도는 점차 떨어지게 된다. 대만의 수출을 말하자면 몇 가지 종류의 특정 농산품을 제외하면 일반 공업품은 국제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聯合報, 1963.2.16)

대만은 경제나 공업 발전뿐만 아니라 신문, 연극, 과학 발전 등등 각 분야에서 자신을 낙후한 후진국으로 인식했는데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자유중국의 신문 산업은 낙후해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가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재의 부족, 물질 조건의 한계, 일부 사람들의 천박한 국어 수준, 그리고 신문용지 가격의 상승, 이러한 이유들이 자유중국의 신문 산업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신문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聯合報, 1951.9.16). “우리나라가 과학이 낙후한 국가라는 것은 숨길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과학 건설이 선진국가를 따라잡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고 이 세대 중화민국 국민의 역사적 임무다.”(聯合報, 1956.2.28) “선진국가에서는 연극은 이미 회전 무대를 사용해 쾌속으로 배경을 바꾼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면에 있어 이렇게나 ‘낙후하다’. 또한 현재 우리의 물질 조건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하다.”(聯合報, 1962.2.7).

이러한 당시의 대만 신문을 관찰해 보면 경제나 공업에서는 확실하게 대만이 ‘후진국가’ 또는 ‘낙후국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유적으로 대만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의제나 신문산업·과학·연극 등에서는 거침없이 ‘낙후국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연극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희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연극 기사의 경우 정부가 연극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쓴 내용이다. 결국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극 분야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그 취지였다.

IV.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대만의 자아정체성(1960년대 중반~1975년)

1960년대 중반에도 대만에서는 방송, 과학, 신문 등 각종 분야에서 선진국을 배우고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되었다(聯合報, 1965.7.12; 1967.3.25; 1969.6.14; 1969.6.24).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각종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강조되었다. 공업 부분에서는 공장 시설과 설비(聯合報, 1964.9.29; 1966.5.1), 상업 부분에서는 은행·금융투자(聯合報, 1970.12.2; 1971.6.24; 1971.12.13; 1975.1.21), 과학기술(聯合報, 1969.6.18; 1970.1.28; 1972.1.29; 1972.7.11),

농업(聯合報. 1970.12.24; 1973.3.24), 취업구조(聯合報. 1970.4.11), 사회복지(聯合報. 1965.9.26), 도시 개발(中國時報. 1969.11.23), 교육(聯合報. 1972.4.7; 1972.11.6) 등이 지적되었다. 대만의 신문은 대만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을 보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사회 각 방면에서 선진국과 뒤떨어져 있고 여전히 후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대만은 경제적인 발전에서 이미 ‘후진국가’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만 자신이 경제성장을 체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라고 생각한다.

1964년부터 대만은 경제안정 성장기에 진입하고,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표2>참조). 또한, 대만이 비약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조건은 외국자본의 도입과 저임금노동을 결합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 대외원조가 종료되고 그 대신 일본이 1.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해 주었다. 1964년~1973년 대만의 수출 지향형 공업화의 성장구조는 외국자본, 저임금노동력, 수출의 삼위일체 체제라고 할 수 있다(園田哲男. 2003, 21). 중소기업과 외자(특히 일본 자본)와 결합해 기계·기술·부품·원료를 수입해 대만의 저임금·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품을 제작,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일본·대만·미국의 삼각무역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1966년 이후에는 공업제품이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을 대체해 수출의 주력 제품이 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의류업이 가장 큰 성장을 보였으나 1975년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후의 화학 원료와 플라스틱 제품 등 화학공업과 전기·전자공업이 경제발전 주력 품목이 되었다(石田浩. 2007, 17, 36, 137-138).

『聯合報』는 대만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2중 압력을 받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우리의 공업 생산은 현재 국외에서 선진국가의 급속 성장과 낙후국가의 급격한 추격이라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

이 작고 자금 부족이라는 이중 난점에 직면해 있다.”(聯合報. 1963.1.3)
 “국제시장에서 대만 상품이 직면한 경쟁은 한편으로는 방직 공업 선진국
 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추격해 오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다. 특히 후
 자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 방직 공업이 방직 선진국가와 ‘신(新)’을 경쟁하
 지 못하면서 우리의 ‘구(舊)’ 상품을 받아들이는 시장을 점차 상실되게 만
 들었다.”(聯合報. 1963.4.16)

그리고 1963년 대만은 ‘중국식 대외원조’를 전개하게 되는데, 자신보다
 낙후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대만의 경험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외원조에 자신감을 보였다. “구미 공업 선진국가가 제시한
 답안은 어떤 때는 반드시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낙후국가 ‘국정(國情)’
 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과거 구미, 심지어는 일본의 선진 경험도 받아
 들였다. 그리고 반세기의 시간을 거쳐 불순물을 없애고 정수를 흡수하고
 융합 통달했다. 또한, 외래의 제도와 방법을 우리 환경·조건·수요에 맞추
 도록 했다.”(聯合報. 1963.7.18)

대만은 ‘낙후국가’에게 대외원조를 지원할 만큼 자신은 ‘낙후국가’에서
 탈피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자신을 개발도상
 국(원문은 신흥국가(新興國家))라고 지칭했다. “공업선진국가는 대다수가
 방직업부터 시작했다. 많은 신흥국가의 공업화도 방직업이 기점이다. 국
 제시장에서 선진국가는 기술과 상품의 개발로 경쟁 기초를 마련하고 선진
 국가는 보호 정책을 경쟁 배제 수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방직도 선진국가를 따라잡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가를 경
 쟁에서 이길 수 없고 후진국가의 신흥 방직업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해
 외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없다.”(聯合報. 1963.10.15)

위 기사에서 『聯合報』는 대만을 ‘신흥국가’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
 으나, 문맥상 대만이 자신의 예를 ‘신흥국가’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이제 경제발전을 한 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진

국을 따라잡아야 하고 해외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외국인 투자 자본 경쟁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신흥국가(新興國家)들에 비해서 공업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탁월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업화 발전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제 건설은 이미 강하든 약하든 선진국가의 자본 수출에 대해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聯合報. 1967.4.30)

대만은 자신을 신흥국가에 비유하며 과거에는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른 ‘신흥국가’ 보다 공업 수준이 높다는 탁월한 조건으로 ‘선진국가’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신흥국가’의 경제 건설로 인해 ‘선진국가’ 투자 유입에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중반 대만은 자신이 경제발전 면에서는 ‘신흥국가’ 위치에 도달해 있고 다른 ‘신흥국가’가 자신을 추격해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자신은 다른 ‘신흥국가’에 추격당할지도 모르는 앞선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은 ‘신흥국가’ 외에도 ‘반선진국(半先進國)’, ‘발전중국가(發展中國家)’, ‘개발중국가(開發中國家)’ 등의 여러 호칭으로 자신을 ‘개발도상국’으로 정의했다(聯合報. 1967.7.9; 1969.1.11; 1969.3.29; 1971.9.14). 대만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성과를 이미 거두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면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 향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업화를 지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聯合報. 1971.9.14).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신문에서 경제 관련 기사에서 대만을 ‘낙후국가’로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聯合報. 1969.11.26).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대만은 자신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만이 자신을 ‘개발도상국’이라 부르는 자신감은 경제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64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12.63%를 기록했으며,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은 11.62%로 무척 높았다.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1974년 경제성장률은 2.67%로 하락했지만, 1975년에는 6.19%로 회복했다.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총소득(GNP)은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64년 25억 달러였던 GDP는 1975년에는 158억 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GNP는 1964년 214달러에서 1975년에는 980달러로 증가했다.¹²⁾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선진국과 거리가 가까워졌고 선진국들이 대만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가 많아졌다. 1971년 2월 『中央日報』는 ‘일본 아시아 금융 및 투자 조사단’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만은 ‘공업 선진국가’에 진입했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中央日報. 1971.2.14).

그리고 1972년 11월 『中國時報』는 ‘미국 신문 및 세계 잡지’가 “제조업이 전국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해 농업이 차지하는 17.7%를 훨씬 넘어섰다. 1976년에 끝나는 4개년(경제계획) 중 경제성장률은 평균 9.6%에 달할 것이며, 1976년에는 중화민국이 세계 선진국가의 대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전했다(中國時報. 1972.11.8).¹³⁾ 대만의 신문은 선진국의 평가를 이용해 대만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970년대 중반 대만은 생활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진국과 가까워졌다고 신문에서 지적됐다. “요 몇 년 들어 본성(本省)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가 번영하고 누릴 수 있는 수준도 일반적으로 높아졌다. 물질생활이 선

12) 中華民國統計資料網(<http://statdb.dgbas.gov.tw>, 검색일 : 2020.6.3.).

13) 1972년 11월 8일. 같은 날 『中央日報』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中央日報. 1972.11.8.).

진국가를 점차 따라잡고 있다.”(聯合報, 1974.7.20)

1975년 12월 대만은 국내 첫 핵발전소를 건설했다. 『中國時報』는 대만의 핵발전소는 세계 13위이며 핵발전 기술은 ‘선진국가의 숲’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만의 “핵의 평화적인 사용 기술 능력은 이미 모든 신흥국가를 초월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전했다(中國時報, 1975.12.14). 이렇듯 대만은 자신이 선진국과 거리가 가까워졌으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앞선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2>에 나타난 경제 안정성장기는 경제 급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없는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만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4마리 작은 용’이라 불리는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 1961년부터 1988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9.3%의 대만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5.6%를 기록했다.¹⁴⁾ 이것이 대만이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도 대만과 같이 한국을 ‘앞선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1960년대 초·중반의 한국을 후진국으로 규정했지만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한국을 후진국에서 탈피해 상위 중진국으로 순조롭게 발전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서 선진국과 비슷한 위치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김종태, 2018, 174-176). 박정희가 한국을 ‘앞선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지만 대만에서는 한국을 자신

14) 1961년부터 1988년 사이의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8.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8.6%,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7%였고,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8.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였다. 이 시기의 대만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일본보다도 낮았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6%,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8%였다(園田哲男, 2003, 15, 18-19).

보다 앞선 나라 혹은 자신과 동등한 ‘앞선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대만의 신문에 나타나는 선진국 담론 속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만을 추격하는 경쟁자로 한국을 규정하는 유형이다. 『聯合報』는 대만이 아시아의 ‘신흥국가’보다 공업수준이 탁월하다고 지적하고, 그 뒤에 ‘아시아의 신흥국가’의 예로 한국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국을 ‘신흥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대만처럼 공업수준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공업 발전은 선진국 투자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대만을 뒤에서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聯合報. 1967.4.30). 『聯合報』의 또 다른 사설에서도 대만은 경제성장 성과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주의하고 새로운 경제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면 ‘신흥공업국가’인 한국에 추격당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여기서도 한국은 대만을 뒤에서 쫓고 있는 추격자로 묘사되었다(聯合報. 1967.7.15).

둘째는 ‘한국이 할 수 있는데 대만이 못하면 안 된다’는 유형이다. 1970년 1월 『聯合報』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납치 미수 사건을 다루었는데 내무부장관 박경원(朴璟遠)과 교통부장관 백선엽(白善燁)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을 칭찬하며 한국을 대만의 거울로 비유하며 한국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만이 못한다면 어떻게 ‘개발중국가’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聯合報. 1971.1.26).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만이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만이 선두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경쟁 심리가 빚어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선진국 담론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덧붙

이자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대만은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경제발전을 인정하고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기에 걸쳐 일본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51년 『聯合報』는 신문 발행을 기념하는 발간사에서, “자유중국의 신문 산업은 낙후해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가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썼다(聯合報, 1951.9.16.). 여기서 일본은 ‘선진국가’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일본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같은 ‘공업 선진국가’는 인건사 공업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인조섬유는 공업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후 인건사 공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설에서는 일본은 선진국의 한 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업 선진국가’ 외의 다른 국가의 예로 등장했다(聯合報, 1953.4.7). 즉 이 기사는 일본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만의 신문에서 일본은 항상 선진국으로 지칭되었다. 1960년 3월의 『聯合報』 사설은 미국과 나란히 일본을 ‘공업 선진국’으로 지칭했다. 그 후 일본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국가’ 혹은 ‘구미와 일본 등 선진국가’라는 식으로 미국과 같이 선진국의 예로 자주 등장했다(聯合報. 1967.7.9; 1967.2.11; 1968.8.21; 1968.11.18; 1969.1.15; 1969.2.8; 1971.12.7.; 1975.1.21).

V. 맺음말

대만에서 선진국 개념은 1950년에 등장해 1952년 경제체제 논쟁 이후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담론 정착 배경에는 대만의 동아

시아 냉전체제의 편입과 미국식 경제체제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 전후 대만의 현대화는 ‘친미반공’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전후 대만은 미국의 보호 하에서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현대화의 방법과 내용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瞿宛文, 2017, 440-441). 이러한 현대화 과정 속에서 대만의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해, 대만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전후 선진국 담론은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구적 패권 담론으로 등장했고, 대만은 1952년 이후 이 패권 담론을 받아들였다. 선진국이라는 발전 담론은 진화론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발전의 가장 최고 수준에 도달한 존재이고, 후진국은 발전이 가장 뒤떨어진 존재였다. 개발도상국은 발전 상황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있는 존재를 의미했다. 세계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발전 단계인 선진국으로 단선적으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0년대 선진국은 대만이 배우고 따라잡아야 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선진국 또한 선진국으로서 후진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세계 경제 발전에 협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선진국 담론 속에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대만의 자아정체성은 ‘후진국’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자아정체성은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차원이 다른 ‘앞선 개발도상국’ 또는 ‘선두에 선 개발도상국’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대만경제발전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대만은 고도 경제 발전기에 접어들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대만은 자신을 ‘선두에 선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대만의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관영 신문인 『中央日報』와 민영 신문인 『聯合報』와 『中國時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국민당이 운영하는 『中央日報』는 정부의 정책이 강하게 반영된 신문이었다. 1950년대

대만의 선진국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이 오로지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시기의 민영 신문인 『聯合報』와 『中國時報』도 당시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정체성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나타나는 자아정체성이라고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 담론이 전파되고 발전해 가는 데는 민간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 통제하에 있는 민영 신문이라고 해도 관영 신문에 비해 독자층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독자들이 좋아하고 호응할 수 있는 주제의 기사를 싣는 것이 중요했다.

‘앞선 개발도상국’은 대만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호응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의 양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 담론은 민간 신문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민영 신문인 『聯合報』와 『中國時報』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며 자발적으로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전파했다고 생각된다.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하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선 개발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만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생존해 가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 2020.06.07. 심사완료일 : 2020.06.21. 게재확정일 : 2020.07.10.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 김종태. 2018, *선진국의 탄생: 한국의 서구중심 담론과 발전의 계보학*, 서울: 돌베개.
- 박정현·김종태. 2015, “중국의 발전담론과 국가정체성의 딜레마”, *아세아연구*(제58권 제4호).
- 박정현·윤은자. 2017, “근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초기까지 중국 발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동북아 발전주의 세계관의 기원, 변화, 그리고 전망: 한국·중국·대만·일본의 정체성과 상호인식 비교, 고려대학교 동북아 발전주의 연구팀 1차 년도 학술세미나*(2017년 8월 17일 개최).
- 왕언메이. 2018, “대만의 선진국 담론 활용 전략과 한·중·일 인식(2007-2017)”, *중국근현대사연구*(제79집).
- 홍창기·정대준. 1999, “한국과 대만의 경제정책 비교연구”, *평택대학교논문집*(제12집),
- 후지이 다케시. 2015, “1950년대 대만의 ‘경제’ 인식 변화와 미국의 원조: 민생주의와 자유경제”, *중국근현대사연구*(제66집).

〈중국어 및 일본어 문헌〉

- 王甫昌. 2003, *當代台灣社會的族群想像*, 台北: 群學出版.
- 文馨瑩. 1990, *經濟奇蹟的背後—臺灣美援經驗的政經分析(1951-1965)*, 台北: 自立晚報文化出版社.
- 石田浩. 2007, *台灣經濟的結構與開展—台灣適用「開發獨裁」理論嗎?*, 台北: 稻鄉出版社.
- 金恩美. 2019, “冷戰時期東亞威權國家對報紙的管制(1945~1987): 以臺

- 灣與韓國的比較為中心”，*思與言*(第57卷第4期).
- 林建山. 2014, “先進國家經濟復甦模式的新轉向”，*紡織月刊*(第216期).
- 柯勝揮. 2008, “總要素生產力、知識經濟與工業先進國家之經濟發展-對臺灣經濟發展之啟示”，*華人經濟研究*(第6卷第1期).
- 黃宣範. 1995, *語言、社會與族群意識—台灣語言社會學研究*, 台北: 文鶴出版.
- 許志義·陳俐姝·黃鈺愷·陳彥豪·楊宏澤. 2016, “虛擬電廠先進國家發展趨勢及對臺灣之政策意涵”，*台電工程月刊*(第817期).
- 陳雅文. 2015, “先進國家風力發電走勢分析: OECD縱橫資料分析”，*淡江大學經濟學系碩士論文*.
- 楊惟任. 2016, “先進國家發展綠色經濟的經驗對我國之啟示”，*國會月刊*(第44卷第11期).
- 郭岱君. 2015, *台灣經濟轉型的故事: 從計畫經濟到市場經濟*, 台北: 聯經出版.
- 蔡春進·古月萍·劉宗勇·張宣武·蘇鈺珊. 2011, “主要先進國家與組織的奈米技術環境、安全與衛生(ESH)的法規進展”，*臺灣奈米會刊*(第24期).
- 趙靜宜. 2006, “台灣與先進國家太陽光電能推廣策略之研究”，*國立彰化師範大學電機工程學系碩士論文*.
- 賴奕君. 2010, “能源稅法制之研究—先進國家實施經驗與我國未來立法方向之探討”，*國立交通大學科技法律研究所碩士論文*.
- 薛化元等編撰. 2008, *台灣貿易史*, 台北: 外貿協會.
- 瞿宛文. 2017, *台灣戰後經濟發展起源: 後進發展的為何與如何*, 台北: 中央研究院、聯經出版.
- 顏志清. 2015, “台灣肌肉骨骼傷害防制體系與工業先進國家之比較”，*國立清華大學工業工程與工程管理學系碩士論文*.
- 園田哲男. 2003, *戰後臺灣經濟の立證的研究*, 東京: 千代出版.

若林正丈. 2008, *臺灣の政治: 中華民國臺灣化の戦後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若林正丈. 1997, *臺灣: 分裂國家と民主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신문 및 온라인 자료〉

“黨義新詮(第三本轉來)四、三民主義是求後進國家與先進國家合作的社會主義”, 中央日報. 1950. 2.14.

“霍夫曼建議先進國家 十年內撥款五通日億援助較為落後地區 認美在援款中應供半數”. 中央日報, 1959.3.1.

“日投資調查團離台前指出 我在工業方面發展 列入先進國家之林”, 中央日報. 1971.2.14.

“美一雜誌列舉實際成果 認我國經濟蓬勃發展 將可列入先進國家”, 中央日報. 1972.11.8.

“遍設兒童樂園”, 徵信新聞. 1958.10.6.

“先進國對少年犯罪 注重感訓教育矯正美國生理心理治療並行 日本設家庭及少年 法院 世界各國一致重視這個問題”, 徵信新聞. 1958.10.20.

“天然能的運用 太陽能、風力、地面熱力, 均為新原動力天然資源, 各先進國家, 已有邁過實驗階段, 開始作實地運用者”, 徵信新聞. 1959. 4.22.

“工業先進國對航業及造船業之扶植”, 徵信新聞. 1959.7.25.

“推行愛用國貨運動 工業趕上先進國家 工業用地北縣佔全省四分之一 李文玉歡迎 設廠並盼獎勵投資 各地各業紛紛響應運動”, 徵信新聞報. 1964.1.20.

“建築完成很久 公共設施闕如 我與先進國家背道而行議員要求改進”, 中國時報. 1969.11.23.

“我經濟擴展欣欣向榮 將列為世界先進國家”, 中國時報. 1972.11.8.

- “興建核能電廠、躋身先進國家之林 三千科技專家、絞盡心血日夜趕工 運送
核子 反應爐、拓道路建鋼橋好不容易 焊接一 座對容器、大帽子防
輻射技術第一”，中國時報. 1975.12.14.
- “聯合發刊獻詞”，聯合報. 1951.9.16.
- “學年開始的教育新課題”，聯合報. 1951.9.17.
- “對於出席貿易會議代表的建議”，聯合報. 1951.9.20.
- “再論資本累積”，聯合報. 1952.8.15.
- “政治進步的鏡子”，聯合報. 1952.11.2.
- “台灣工業化的成敗關鍵”，聯合報. 1952.12.22.
- “文藝與精神文化”，聯合報. 1953.5.24.
- “檢討「杜魯門時代」”，聯合報. 1953.1.15.
- “人造絲統籌進口問題”，聯合報. 1953.4.7.
- “美應主動增加對華援助”，聯合報. 1953.11.11.
- “所謂取締不正當競業”，聯合報. 1954.10.2.
- “建立健全而合理的退休制度”，聯合報. 1954.10.3.
- “請政府公開美國經濟顧問團的建議書”，聯合報. 1954.10.8.
- “培育第二代科學家”，聯合報. 1956.2.28.
- “送別蔣廷黻先生的話”，聯合報. 1956.3.27.
- “分析莫斯科的兩項『宣言』”，聯合報. 1957.11.25.
- “英美法等國人士 均一致表示讚許”，聯合報. 1957.4.17.
- “春節談娛樂”，聯合報. 1962.2.7.
- “吸引美國投資者的好時機”，聯合報. 1962.3.15.
- “檢討經濟局勢的一些問題”，聯合報. 1963.1.3.
- “台灣的經驗現狀與美援計劃”，聯合報. 1963.2.16.
- “紡織工業的道路”，聯合報. 1963.4.16.
- “外交僑務的一條出路”，聯合報. 1963.7.18.

- “評棉織品輸美四年雙邊協定”，聯合報. 1963.10.15.
- “我們反對在解除設廠限制中增加限制”，聯合報. 1964.9.29.
- “鼓勵以發財為目的的創業精神”，聯合報. 1965.1.13.
- “優良節目與社經發展”，聯合報. 1965.7.12.
- “我們對四年社會福利計劃的認識與建議”，聯合報. 1965.9.26.
- “慶祝勞動節談勞工生活與福利”，聯合報. 1966.5.1.
- “輸出激增中可注意的形勢”，聯合報. 1967.2.11.
- “為科學發展指導委員會提供做法”，聯合報. 1967.3.25.
- “獎勵外人投資條例亟待修正”，聯合報. 1967.4.30.
- “我們主張提高國民所得的教育支出百分率”，聯合報. 1967.7.9.
- “發展私人企業的六大問題”，聯合報. 1967.7.15.
- “應該怎樣解決房地價格暴漲問題”，聯合報. 1968.8.21.
- “對當前銀行信用寬緊的分析與建議”，聯合報. 1968.11.18.
- “外資利用問題”，聯合報. 1969.1.11.
- “物價問題的基本認識”，聯合報. 1969.1.15.
- “物價、投資與經濟成長”，聯合報. 1969.2.8.
- “振奮中興氣象 鼓動全面革新”，聯合報. 1969.3.29.
- “我國新聞事業發展的新階段”，聯合報. 1969.6.14.
- “學以致用的新措施”，聯合報. 1969.6.18.
- “當前新聞工作的使命與作法”，聯合報. 1969.6.24.
- “由電子展覽看工業發展前途”，聯合報. 1969.11.26.
- “發展科學技術為當前施政的急先”，聯合報. 1970.1.28.
- “對淨化新聞傳播的幾點意見”，聯合報. 1970.4.11.
- “勇於檢討農地重劃工作的缺失”，聯合報. 1970.12.24.
- “論利率政策的運用”，聯合報. 1970.12.22.
- “借韓國之事以論政風”，聯合報. 1971.1.26.

- “對於信託投資公司的期望”，聯合報. 1971.6.24.
- “評「機械工業發展方案」”，聯合報. 1971.9.14.
- “創建工商業申請貸款的訴願制度”，聯合報. 1971.12.7.
- “商業銀行應全面開放民營”，聯合報. 1971.12.13.
- “台大成大科學研究風氣的影響”，聯合報. 1972.1.29.
- “欣見職業教育的抬頭”，聯合報. 1972.4.7.
- “對籌設工業技術研究院的意見”，聯合報. 1972.7.11.
- “台大火箭社的試驗所引發的諸種問題”，聯合報. 1972.11.6.
- “實施農業保險不能只說不做”，聯合報. 1973.3.24.
- “掃蕩色情問題的面面觀”，聯合報. 1974.7.20.
- “銀行官股董監事人選的檢討”，聯合報. 1975.1.21.
-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http://dict.revised.moe.edu.tw>).
- 中華民國統計資料網(<http://statdb.dgbas.gov.tw>)